

미국 국방비 감축과 이란 리스크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2010년~)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국민투자증권 투자분석부(99~05년)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연구위원(06~09년)
 조선일보·매일경제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08년)
 SK증권 투자전략팀장(09년)
 sigo1@naver.com

재정 건전화 과정에서 미국 국방 지출 축소 불가피

영국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저서 <콜로르스-아메리카 제국 흥망사>에서 “쇠퇴하는 제국의 재정 문제는 흥미롭다”고 썼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 최대로 그 다음 20개 국가(2~21위)의 국방비를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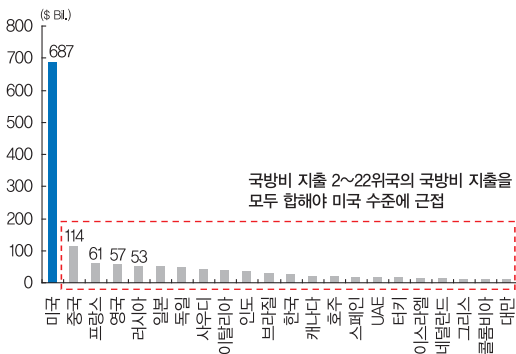
퍼거슨은 군사력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경제력이므로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퍼거슨의 주장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2011년 8월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후 미국의 재정 개선 논의 과정에

서 국방비는 가장 우선적인 감축 대상으로 지목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방비를 향후 10년간 3천500억 달러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2011년 11월 재정 적자 축소 논의를 위한 민주당-공화 양당 슈퍼위원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미국 국방비는 2013년부터 10년간 6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삭감이 예정돼 있다.

국방비 지출이 미국 국가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니다. 미국 재정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부시 행정부 이후 국가부채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9.11 테러 직후 단행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세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보장비(연금 보조+고령자 의료 보호) 지출이 다음 순위다. 미국 재정 악화는 해외 파병 등 과도한 군사비 지출의 결과가 아니라 세금 감면(공화당 주장)과 복지 지출 확대(민주당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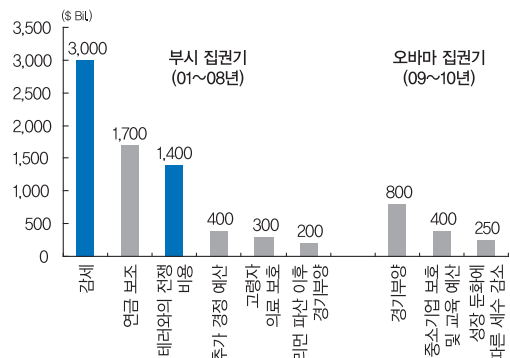
그러나 감세와 사회보장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책이기에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2012년 대통령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당장의 국가부채 감축 논의에서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 손을 대기보다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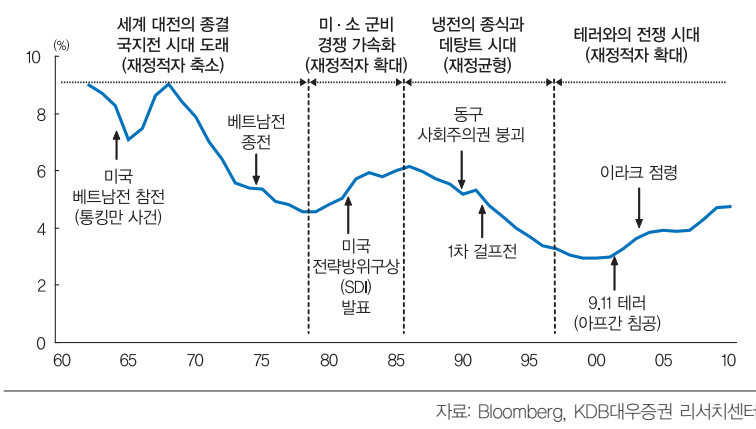
자료: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 국가부채 증가 원인



자료: 백악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추이



를 조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재정 건전화와 미국 국방비 축소

국방 전략 무게중심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미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국방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올 1월 초에 발표된 국방부의 '국방 전략 지침'에서 미국은 사실상 2개 지역에서의 동시 승리(two-war) 전략을 폐기하고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 같은 대규모 장기 지상군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기적인 국방비 지출 축소를 반영한 국방 전략 수정이 가시화된 것이다.

미국의 국방 전략은 1개의 국지전에서 승리를 추구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원 플러스'로 바뀌고 있다. '원 플러스' 전략의 특징은 미국 안보의 축을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중동에서의 역할 축소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미국

■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

	새로운 군사 전략	과거의 군사 전략
명칭	원 플러스(one-plus) 전략	2개의 전쟁 (two-war) 전략
내용	1개 국지전에서 승리 추구 다른 지역 분쟁에서는 현상 유지 추구	2개 국지전에서 동시 승리 추구
도입 배경	재정 건전화 과정에서의 국방 예산 감축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했던 90년대 초 탈 냉전 시대 초기에 도입
지역 정책	중동보다는 아시아·태평양 중시(중공 견제)	아시아·태평양과 중동 지역 동시 승리 추구

자료: 미국 국방부

국방 전략의 무게중심은 중국 견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상군 인력의 전반적인 감축 기조 속에서도 동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은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는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라크 철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전까지 진행됐던 북-미 관계의 진전 분위기 등은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할 미국의 고심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도의 문제이지, 중동 지역의 분쟁 조정자로서 미국이 누렸던 위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란 문제가 과거 중동 지역에서 나타났던 국지적 분쟁과 구별되는 것은 미국의 영향

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돌출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점이다.

과거 중동 위험과의 차이점

미국 힘이 약해지는 가운데 이란 위험 돌출

지금까지 중동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지정학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제1차 걸프전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이라크를 제압하며 사태를 종식시켰다. 2003년 제2차 걸프전에서도 세계 경찰국가로서 미국이 갖고 있는 위력이 유감없이 드러났다. 당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명분은 후세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미국은 한 달여 만에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며 승리를 거뒀지만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쟁의 명분이야 어쨌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동의 토착 정권을 몰락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확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제 중동에서 미국의 힘은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최근의 이란 관련 사태에서도 도발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다. 잇따라 핵 관련 실험을 공언하고 미국의 무인정찰기도 격추시켜 버렸다.

한편에서는 미군이 철수한 이라크의 정정도 불안하다. 이란과 이라크의 대립은 중동의 세력 균형을 유지해 왔던 전통적인 균형주였다. 이라크는 아라비아반도의 북단에서 이란과 맞닿아 있다. 같은 중동이지만 이라크와 이란은 민족이 다르다. 이라크는 아랍인이 주류이고 이란 민족은 페르시아인이다. 1980년대에도 양국이 8년여에 걸쳐 전쟁을 치른 것처럼 이라크는 이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의 국력은 많이 쇠잔해졌다. 미군 철수 이후 이라크 내부에서 물리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철군 이후 이슬람 시아파가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란이 이슬람 시아파의 원조 국가이기 때문이다. 종파로 보면 이라크가 이란을 견제하기는커녕 이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라크에서도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시아파 블록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것인가?

이란 사태가 호르무즈해협의 무력 충돌로 귀결될 것인가?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미국 입장에서 무력 충돌의 실익은 크지 않다. 재정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제 막 이라크에서 철군을 마무리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이란도 미국과 전면전을 치러서는 궁극적으로 승산이 크지 않고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란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1940년대 루즈벨트 행정부와 1970년대 닉슨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적대국 이란과 손잡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 수도 있다. 2차 대전 당시 루즈벨트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했고 1970년대 냉전 시기의 닉슨 정부는 공산주의 중국과 수교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적대국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더라도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타협은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당장 미국과 이란이 유

화적인 관계를 맺기는 힘들다. 이런 일이 현실화되더라도 그 시기는 금년 11월 대선이 끝나고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호르무즈해협의 물리적 충돌이 현실화되기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긴장이 지속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1차, 2차 걸프전 때에는 압도적 물리력을 가진 미국이 이라크를 조기 제압하면서 원유 가격에 형성됐던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미국에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후 조기에 하향 안정화되는 양상보다는 고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불확실성의 온존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동지역 국가 분포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차 걸프전 전후 국제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차 걸프전 전후 국제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지정학적 리스크 점증에 따른 고유가는 동북아 증시에 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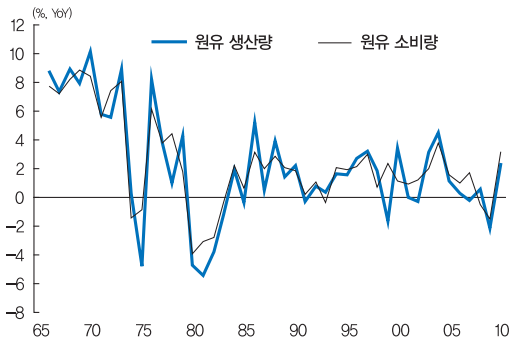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한 것처럼 유가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 급등할 수 있다. 국제원유시장의 수급은 상당히 뻣뻣하다. 2000년대 들어 10년 동안 원유 생산은 물량 기준 연평균 0.9% 증가한 반면 소비는 1.3% 증가했다. 수급이 뻣뻣하기 때문에 원유 생산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지면 유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유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단기 급등 후 조기 안정보다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의 고공권 유가 지속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 유가가 급등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만 유지되더라도 원유 수입국의 물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작년에도 중동 지역 소요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지만 연초 1~2월의 유가 수준은 낮았다. 그러나 금년 1월 들어서는 유가가 15%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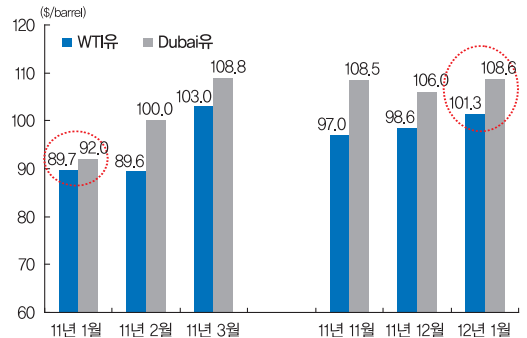
수요 증가(demand pull)가 아닌 비용 상승(cost push)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큰 동북아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2011년 2~3월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동북아 증시의 동반 조정으로 이어졌다. 높아진 유가는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은 고공권 유가가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원유 생산량과 소비량 비교



자료: BP,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국제 유가 비교 (2011년 vs 2012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